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

이재명 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오는 5월 9일 만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

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적 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

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세 중과 종료 방침에 대해 강남 다주택자들이 증여 러시에 나선다는 기사를 또다시 첨부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된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날 밤늦게는 세금 내고 집을 파느니 차라리 소유하고 있겠다며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보다 강도 높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하루에만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네 차례나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6·3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전체회의 비례대표 비율 지역 상황 감안될 듯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비례대표 의원 확대 ‘주목’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3지방선거 선거구 확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시·군)은 이날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마다 달리 입법할 수 있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는 이미 특별법에 따라 20%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엔 행정통합이 되는

지역도 경우에 따라 특별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달리 입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철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렇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 사정에 따라 입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교육의원 정수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인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 정수를 그대로 유지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민주주의 위해 헌신했던 삶 기릴 것”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제주 정가 애도 물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도내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삶이 보여준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꾼 고인의 숭고한 의지를 제주와 대한민국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일정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해지자 26일로 예정됐던 제주4·3평화공원 참배와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제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로 제주 일정을 급히 취소하게 됐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방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에서도 “고인은 엄혹했던 독재 시절부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온몸으로 시대를 관통해 온 현대사의 거목”이라며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며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해찬 전 총리는 제주4·3의 시린 겨울을 온몸으로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라며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토대를 놓은 1999년 4·3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오소환·양유리기자

제주, 건설자재 대란 우려

>> 1면에서 계속=옹역진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원희룡 도정 때 추진됐던 채석장 공공개발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원 도정은 공공기관이 채석장을 운영하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발 이익도 환원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2021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옹역진은 특히 현재 토석 채취 허용 심도(깊이)를 40m 이하로 못 박은 허가 지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을 뒤 60~70m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옹역을 의뢰한 도 산림부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심도 기준 조정에 대해선 권고 형태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할지, 지침으로 규정할지 검토 중”이라며 “공영개발 제언의 경우 담당 부서가 건설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앞으로 토의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옹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가 지난해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진행했다.



무말랭이 만드는 영농조합 26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영농조합에서 청정 제주산 무말랭이를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갑질·비위 행위 확인되면 무관용 문책”

서귀포시, 설문조사 확대·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서귀포시가 공직사회 갑질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확대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제발 방지를 위해 16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갑질행위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서귀포시 갑질행위 실태조사 결과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비인격적 언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4~6급 관리직과 7~9급, 공무원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청렴자율학습시스템 운

영과 갑질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제작·공유 등을 통해 공직자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고, 갑질 발생 위험자가진단, 내부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갑질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상시 예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갑질이나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위영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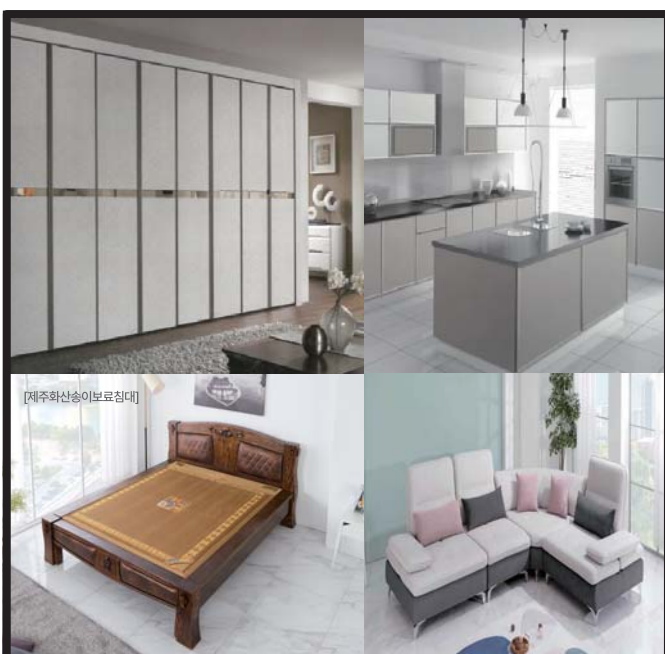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발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규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